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5.(화) 06:00 < 11. 25.(화) 석간 > 배포 2025. 11. 24.(월)

민-관 힘 모아 탄소중립을 산업 성장의 기회로!

- 산업부-기후부,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공동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11.25(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되었다.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상쇄) 배출권거래법 제29조(상쇄), 동법 시행령 제47조(상쇄)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5% 한도)

** (추가할당) 배출권거래법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동법 시행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따라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 가능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도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기후부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4237)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1-66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간담회 개요

□ 배경

○ **2035 NDC 확정**(△53~61%)에 따라 **산업계 우려가 있어 ▲對 산업계 소통**과 함께 **▲업종별 로드맵 수립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개요

○ **(일시)** '25.11.25(화) 10:00~11:40

○ **(장소)** 서울 대한상의 1층 Executive Conference Room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 **(참석)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 주요기업(철강·시멘트·석화·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R&D 전략기획단, 학계·연구계 전문가*

* 이상준 교수(서울과기대),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 **(안건) ❶ 「2035 NDC」 전체 내용**(기후부) **및 산업계 지원 내용**(산업부)
❷ 산업 탄소중립 전략 및 **정책 건의사항** 논의(참석자 전체)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 ~10:10	(10')	모두발언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10:10 ~10:20	(10')	2035 NDC 전체 내용 설명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
10:20 ~10:30	(10')	산업계 지원 내용 설명	산업부 산업환경과장
10:30 ~11:30	(60')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1:30 ~11:40	(10')	마무리발언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참고 2 2035 NDC 관련 산업계 지원 내용

1. 배출권거래제는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

□ 규제수단인 **배출권거래제(ETS)**는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 상한 목표**(△61%)는 **규제 外 수단***으로 달성 추진

*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 완화로 **감축설비·기술개발 투자 여력 확보**

2.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 NDC 수립시 **생산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추가할당** 가능

* 철강·석유화학 등 사업재편, 건설경기 침체 따른 시멘트 생산감소 등 전망 반영

**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이 있거나, △사업장내 설비 가동실적이 증가하여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가능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7조)

⇒ 산업계의 감축노력 外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담 가중 최소화**

3.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 가능(한도 5%)

□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중소기업**(공급망 협력사 등) 등 외부사업 **감축지원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자사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활용**

* '25.11.1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 개최

⇒ **상생형 감축모델** 촉진으로 감축노력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여,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 규제* 대응역량** 제고

***** EU發 탄소규제(CBAM, 배터리규정 등) 등 탄소중립 규제가 산업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추세

참고 3 2026년 산업부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과제

□ **(R&D)** 9년간('27~'35년) 全산업·全주기(개발→실증→상용화)에 걸친 **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 위한 **5조원 이상 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 착수

* ①주력산업의 한계돌파형 기술, ②全업종 적용형 기술, ③순환경제 부문 핵심기술 등

□ **(감축설비)** 산업계 탄소감축설비 구축 확대를 위한 **경매·협약·파트너십*** 등 **혁신적 지원제도 도입**

* (설비투자 경매) 톤당 감축비용을 기준으로 경매 → 비용 낮은 순으로 선정 및 설비자금 지원 ('26년 신규 250억원) → 향후 탄소차액계약제도와 연계

** (성과기반 협약) 감축실적 초과달성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정부-기업간 협약 마련

*** (산업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정부·원청기업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지원 →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감축('26년 신규 105억원)

□ **(금융)** 대규모 감축설비·R&D에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주요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경로를 담은 **'업종별 GX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22~'25년간 96개 프로젝트에 5,970억원 융자 → 민간투자 3.5조원 창출 ('26년 예산 1,720억원)

** 우선적으로 철강·석화 등 다배출업종 중심으로 로드맵 수립 → 전환금융과 연계

□ **(산단)**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그린전환 파트너십**'** 사업 운영 등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 밀집 지역의 탄소감축 가속화

*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등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그린전환 파트너십)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지역·산단을 발굴하여 저탄소 공동활용 설비 구축 지원 ('26년 예산 28억원)

□ **(규제대응)**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재생원료인증제*** (산업부-기후부 협조), **'산업 공급망 데이터 스페이스**'** 등 제도·인프라 확충

* (자원효율등급제) 제품의 순환성 정보(내구성·재활용가능성 등)를 등급으로 표시
(재생원료인증제) 제품의 공급망 全과정의 재생원료 사용량·함유율을 인증

** 공급망 내 기업들이 규제 이행에 필요한 재생원료·탄소배출량 등 산업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EU·일본 등 선도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의 데이터주권(영업비밀) 보호)

□ **(법제) 산업부문 GX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산업GX법*」 도입**
→ 거버넌스·경매·협약·파트너십·전환금융 등 **GX 지원정책 고도화**

* 기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을 전부개정

참고 4 2026년 기후부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과제

□ **(R&D) 탄소중립 핵심기술*** R&D('26~'30년, 4.4조원), **K-순환경제 리본프로젝트(예타 진행 중)****를 통해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실증 추진**

* (**청정 전력**) 태양광, 풍력, SMR, (**청정 연·원료**)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청정 인프라**) 에너지 저장장치, 차세대 그리드, 히트펌프, CCUS, 에너지 AI 등

** 3대 중점 폐자원(폐플라스틱, 미래폐자원, 유기성폐자원)의 고품질 순환원료화·유가자원 회수 기술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후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품목의 순환이용률 향상 추진

□ **(감축설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 무상할당 대기업도 포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 지원

* 탄소무배출설비 및 연료전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

□ **(금융)** 기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탄소중립 투자* 지속 지원**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금융 도입** 추진**

* (탄소저감 연계 대출) 탄소중립 투자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제공하거나 추가금리 지원
(기술기반 보증)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 대상으로 신보·기보를 통해 보증 제공
(녹색활동 집중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녹색채권·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자비용 등 지원

** 녹색금융 활용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금융(금융위 주관)

□ (**순환경제**) **K-에코디자인** 도입·**재생원료 사용인증 강화***, **규제특구 지정**, **순환원료 全주기 관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전기차 **통합정보센터*****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제도 확충

* (에코디자인) 제품 환경영향 관련 포괄적 설계기준(탄소발자국, 재활용 용이성 등) 마련
(재생원료)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24.3~)를 기반으로 생산-유통-사용 전과정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26년 PET병 10%) 지속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24.7~), 순환원료 종합관리시스템('26~)

*** (생산인증)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의 재생원료(리튬, 니켈, 코발트 등) 생산품을 인증
(정보센터) 전기차 배터리 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 산정·평가로 해외규제 기업대응 지원

□ **(법제)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26년, 기후부-산업부 협업)

※ (주요 내용(안)) 재정·금융 투자, 규제 혁파,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조성 등